

## 2016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 기후변화 분야 충청남도 정책제언

이상신(sinslee@cni.re.kr) / 윤수향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 2015년말 파리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신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2016년을 맞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 ◇ 부처별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요약·정리하여 2016년 충청남도 도정의 기후변화 분야 정책방향에 참고하고자 함.

### □ 2016년 정부 업무보고 발표

○ 지난 1월 정부부처 업무보고, 5개 분야 부처별 보고



▶ 2016 정부 업무보고(<http://www.korea.kr/2016briefing>)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요업무는 ‘국가혁신’ 분야 중 안전혁신, 환경혁신을 중심으로 9개 부처에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

## □ 미래창조과학부

### ○ 2030년 온실가스 17백만톤 감축을 위한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 정부 연구개발 성과와 산업 현장 의견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후기술 및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모델\*\* 개발

\* '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2%(17백만톤)를 기후기술 혁신으로 감축

\*\* (예시) 도심형(건물외벽 및 창호)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조류 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유전 구축, 폐기물 활용 수소전기 생산 등

- 또한, 제철소 부생가스 등 온실가스를 재활용하여 화학소재·제품 생산 등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탄소자원화 전략」 수립('16.3)추진

\* 주요내용: 탄소자원화 전주기(포집→전환→가공) 기술개발, 실증단지 조성 등

## □ 행정자치부

### ○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복지부)

- 취약계층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잠재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 현황을 지속 관리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서비스 개시

\*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12개 기관 총 24종

-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해 국토부, 고용부 등과 순차적 협의('16.1월)

### ○ 도로위험정보 실시간 제공(기상청)

#### ① 도로위험기상정보 생산 시스템 구축

- 도로경로별 위험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자료수집·처리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인프라 연계를 통한 도로위험기상정보 생산 환경 구성

\* CCTV 영상 자료 확보, CCTV 영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계 필요

#### ②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 대상 위험기상정보 시험 생산

- (대상구간) 영동고속도로 강원권(여주분기점 ↔ 강릉분기점)
- (생산정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도로경로별 위험기상정보

\* 기상관측자료(기온, 강우량 등), 기상상태(눈, 비, 안개), 교통사고 위험도

## □ 농림축산식품부

### ○ 스마트팜 보급 확대

- (시설원예) '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10천ha) 중 수출이 가능하거나 생산성향상 및 노동력 절감이 기대되는 40%(4천ha)에 우선 보급
- (첨단형) 파프리카·토마토·화훼 등 수출재배 첨단온실 600ha(기존394+추가206)
- (복합관리형) 딸기·오이 등 규모화된 연동형 온실 2,400ha(기존334+추가2,066)
- (간편관리형) 참외·수박 등 소규모 재배시설 1,000ha(기존41+추가959)

면적 ( '15)	토마토 (5,380)	파프리카 (575)	화훼(장미,국화) (841)	오이 등 (2,836)	딸기 (6,789)	수박 등 (12,299)	참외 (5,380)
보급 목표	첨단형(첨단온실, 수출 : 600ha) (기존) 394 + (추가) 206						
	85	215	300				
	복합관리형(연동 : 2,400ha) (기존) 334 + (추가) 2,066					간편관리형(단동:1,000ha) (기존) 41 + (추가) 959	
	700	360	539	201	600	600	400

- (축산) '17년까지 전업농의 10%(730호)를 대상으로 스마트 축사 보급

\* 대상 축종 : ( '15) 양돈·양계 → ( '16) 한우·낙농 추가

### ○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현장지원 강화

-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모델을 시범 보급(9월)하고, 첨단 유리온실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 개발(12월)

\* 기 보급된 스마트팜 모델의 비용(시설·운영비) 및 성능에 대한 검증(7월~)

-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국내 생육환경 및 재배작목에 적합한 생육관리 S/W를 조기에 개발·보급( '16 : 토마토 → '17 : 딸기·국화·파프리카)

\* 세종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 화순 한울농장은 스마트팜 도입 후 토마토 생육정보(열매수·줄기길이 등) 수집·분석을 통한 생육환경 최적화로 3년만에 생산성 55% 향상

## ○ 쌀 들녘경영체 확산 및 사업다각화

- 들녘경영체\*를 확대('15:224개소/51천ha → '16:250/55)하고, 경영체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사업다각화(벼농사 → 가공유통) 모델 육성\*\*(22개소)

\* 평균적인 벼 재배농가 대비 생산비 약 10% 절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들녘경영체를 활용한 밭·보리·사료작물 등 답리작과 콩팥 등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경영체는 경영면적의 10~20%에 타작물 재배 유도(3천ha)

- 생산비 절감 및 작부체계 개선 등 성과확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 산청 영실영농조합법인은 벼와 조사료 답리작, 맥주보리 재배 및 수제맥주 제조·판매를 통해 벼농사만 지을 때에 비해 매출 2.5배 증가('10:19억원→'14:49)

## □ 산업통상자원부

### ○ (ESS) 국내 신규수요 창출 등을 통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송배전용 ESS 구매 확대 ('16~ '17년 3,800억원)
-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 부착시 인센티브 제공
-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가이드라인 마련, '16.上)
- 국가별 시장·전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외진출 추진

\* (미국) 송배전용, (도서국가·페루) 신재생+ESS, (일본) 소규모 가정용

### ○ (태양광 등) 입자·환경 등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확대 및 부품·기자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하천부지, 수상, 발전소 유희부지 내 입지허용을 통해 태양광 설치 지역 확대
-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신재생 보급·기술개발에 1.5조원('16~ '17)을 투자하여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추가 이행('15년 2.6% → '17년 4.2%)

- 클린에너지 관련 소재·부품 R&D 대폭 확대( ' 16. 1,800억원)

- 에너지공기업-태양광 중소·중견기업의 공동해외진출 촉진

- \* (사례) 우즈베크 태양광 실증단지(130kW) 조성·운영(국내 기자재 중소기업 등 진출)

#### ○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

- 친환경 에너지타운, 에너지 자립섬, 공동주택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모델 창출 및 실증경험 확보

- 전력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 민간 제공\*을 통해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

- \* 「전력 빅데이터 센터」 개설( ' 16. 下)

- 정상외교, GCF, ODA 등을 활용한 종합 해외진출 지원

- \* 스마트미터,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제품-서비스-솔루션 종합 해외진출

#### ○ 에너지산업, 서비스업, 입자·환경 등 규제완화(무투회의 등 활용)

-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 완화

- 개인(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도 재판매 허용

- \* 「전기사업법」, 「소규모 신재생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

- 에너지 신기술,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제한 완화

- 대용량(1MW이상)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해 생산·저장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 허용

- \*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 시장 참여요건, 시장 거래절차 등 마련

- 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전력중개사업 허용

- \*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 과제 발표( ' 16. 上)



## □ 보건복지부

### ○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

① (복지공무원·지역 주민 21.1만명) 읍면동 중심의 인적안전망 전국 확산

\* 현장공무원 31천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3천명, 좋은 이웃들 23천명, 복지  
통(이)장 94천명

② (보건복지분야 인력 174만명) 민간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 적극 활용하  
여 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활성화

- 위기가구 사례·유형 제공, 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129 보건  
복지콜센터, 읍면동) 등 홍보 강화 추진

\* 사회복지사 등 50만명, 돌봄제공인력 77만명, 의료인·구급대원 등 56만명

### ○ 취약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 13년 335천명 → ' 16년 470천명)

-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노(老老)케어, 돌봄기본서비스  
등을 통한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 등 확대

- 거동 불편 80세 이상 독거노인에 가사서비스 제공 확대

- 농어촌지역의 경로당 등을 개보수하여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  
활홈’ 모형 개발 및 지자체 확산 ( ' 16.上)

### ○ 의료 취약지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공공의료를 보완

- (도서벽지) ' 15년 11개소에서 ' 16년 20개소 확대

- (농어촌)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을 30  
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 (특수지) 격오지 군 부대(40개소 → 63개소), 원양선박(6척→20척), 교정시설  
(30개소 → 32개소)

○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하게 확대

- (근로자)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5개 공단 250명)
- (만성질환자)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의원과 종합병원간 토털케어 서비스 제공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만 가능하므로 이곳에서 환자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하여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 합병증 발생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는 1차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를 구축

< 사업 시나리오 >

상급병원에서 직접 환자에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상급병원에 다니는 경증 만성질환자 A씨를 동네의원으로 회송하여, 동네의원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받고 식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받음. 전에는 혈압약 처방을 받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다니고 있었으나, 처방받는 약만 복용할 뿐 평소 혈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았음. 하지만 이제 A씨는 동네의원에서 원격모니터링 상시적 관리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에 다닐 때보다 혈압수치도 떨어지고 더 건강해졌음

○ (노인)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도 확대(6개소→10개소)

- 농촌거주 노인의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농업 안전보건 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1인 취약가구 보호 추진

①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의 생활실태·위험유형 정밀 분석,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정책대상화

\* (1인 가구 비율 증가) 9.0%( ' 90) → 23.9%( ' 10) → 31.3%( ' 25)

\* (1인 취약가구 위험도/다인가구 대비) 노년층의 단절경험 3.8배, 중장년의 자살생각 비중 4.6배, 청년 실업률 1.8배

- 각 부처가 시행중인 사회보장사업이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화 하도록 관계부처 합동종합대책 수립

\* 일자리, 주거, 금연 식생활 상담, 안부확인 상담 등 부처별 사회보장사업 연계

## □ 환경부

○ 5대 환경난제(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

① (미세먼지) 국내·외 발생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

- 실시간 중국 대기질 정보 확보\*, 美NASA와 공동연구('15~'20),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16~'20) 등으로 예보정확도 제고('13년 73% → '16년 89%)

\* '15.12월부터 35개 도시 대기질 정보 실시간 수신, '17년까지 74개 도시 확대

-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 확대(1·2종→3종), 대량배출 사업장 72곳 6천톤 감축, 노후차 5.9만대 저공해화\* 등 국내 저감대책 강화

\* 노후차 조기폐차(3.8만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만대), 엔진개조(1천대) 등

- 한-중 공동 저감사업('15년 150억원) 확대\*, 우수 강소기업의 중국시장(5년간 대기분야 304조원투자) 진출지원\*\* 등 중국발미세먼지 저감강화

\* 대상지역(산동성→하북성·산서성 등), 분야(제철소→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

\*\* 정부간 협력채널 정례화, 민관합동 협력단 파견 등

② (상시가뭄)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8억톤) 수자원을 확보 하여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

- (물확보) 도심 빗물저류침투시설('16년 세종시 등 4개도시 시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가용 수자원 추가 확보

- (물공급) 노후상수관 교체·보수로 누수 저감('12년 24% → '17년 17%)

- (물절약) 물절약 목표관리제, 절수제품 의무설치 확대로 물수요 절감

\* 공중화장실·목욕·숙박·체육시설 → 공공건물대형건물(연면적 5천㎡이상) 추가

○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 한류화하여 신기후체제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 ① (친환경에너지타운) 국내·외로 확산가능한 신(新)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수출 브랜드화(“제2의 새마을운동”).
  - 수익성 강화(폐열활용 농작물 재배·판매 등), 관광 명소화(홍천강 꽃길 등 주변지역 연계), 개도국 공무원 견학\* 등으로 홍천사업 명품화
    - \* 국제환경정책연수과정(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12개 과정 330명
  - '16년 5개소, '17년 4개소 착공, '18년까지 총 10개소 완공으로 전국 확산
  - 중국 생태마을사업\*, 녹색기후기금 개도국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 수출
    - \* 한·중 공동연구(환경공단-중국환경과학연구원), 시범사업 MOU 체결('16.상)
- ② (탄소제로섬) 국내·외 섬지역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을 개발하여 제주도에 시범적용하고, 대개도국 수출 브랜드
  - 발전·수송 위주의 기존모델(제주도, '12.5)에 비산업 부문을 포함하여 탄소 제로화 계획 완성
    - \* (제주도 배출량) 발전도로수송 66%, 가정건물 10%, 폐기물 4%, 기축 등 기타 20%
  -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수자원 확보, 생태계 보전 등 적응대책 추가
    - \*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해수담수화, 구상나무 복원 등
  - 개도국 보급을 위한 한-UNEP 공동 정책모델 제안('16.5), 국제기금(GCF, ADB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 ③ (기상·기후 융합서비스산업) 하루에 십만 기가바이트(GB)씩 생산 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경제·환경·산업 등 부문별 데이터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기상청)
  - \* (예시) (농업) 채소생산량 예측 (관광) 관광기후지수 개발 (수산) 오징어 어획량예측 (수자원) 지역별 가뭄지수 제공 (보건) 감염병·만성병 예측 등
    - 금년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방,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창업교육과정 개설('16.12),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예비창업자 플랫폼 제공확대, 융합서비스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 등 지원체계 구축

## □ 국토교통부

### ○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공급 시스템 구축

- ① (댐건설) 지자체 추진 소규모댐(원주·봉화·대덕)은 차질없이 시행하고 국가 시행댐(문정·영양·달산)은 지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추진

\* 원주천·봉화댐 : 설계(∼ ' 16.12), 대덕댐 : 타당성조사(∼ ' 16.10)

- 지역이 희망하는 댐 건설을 위해 댐 희망지 공모제 도입( ' 16.5)

- ② (공급능력 극대화) 댐 준공 이후 실측된 수문자료를 바탕으로 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능력을 재평가하여 댐 운영조정 등 개선방안 모색

\* (완료) 낙동강수계 5개댐( ' 14.7∼ ' 15.8), (진행중) 한강수계 3개댐+보령댐( ' 15.9∼ ' 16.6), (추진예정) 금강수계 4개댐(대청·용담·부안·군위댐, ∼ ' 16.12)

- 댐-보-저수지 연계운행을 국가하천 전반으로 확대하고(4 → 12개강 수계), 해수담수화를 통한 임해산단 공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 16년)

- ③ (효율적 활용) 既확보된 4대강 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 16.10), 하천수 허가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허가 및 무단취수 관리강화

- ④ (예경보제 도입) 전국 대상으로 지역별 물부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가뭄 예경보제 도입( ' 16.3)

### ○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① (도시하천 홍수대책) 기관간 협업을 통한 21개 취약하천 유역종합치수대책\* 수립으로 100년 빈도 이상 홍수방어 및 예산절감 추진

\* (신규계획) ' 15년까지 7개 하천 착수, ' 16년 3개 하천 착수 → ' 17년 계획수립 완료 (기존계획 조정) 11개 하천 유역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관리 지원

- ② (예보체계 강화) 사용자 중심 홍수정보 제공 및 예보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한 홍수 예보체계 강화 마스터플랜\* 마련( ' 16.6)

\* 홍수 예보지점 확대(국가하천 → 228개 지자체), 예측시간 6시간 확보 (기존 3시간) 등

## ○ 생활공간의 안전 강화

- ① (건축물) 화재 폭설 지진안전 등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건축물 종합성능평가제도 마련
  - 불법 건축자재 사용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공사 현장에서 자재공장 및 유통장소로 확대 시행
  - 건축물 유지관리매뉴얼 마련( ' 16.1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여 상시적 안전관리 문화 확립
  - 주로 공공건축물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디자인을 일반 건축물의 내 외부에도 확대 적용하는 기준 마련

## ○ 현장중심의 건설안전 강화

- ① (관리체계 개선) 설계단계부터 시공 중 위험요소를 고려하고 준공 후 사업참여자의 안전역량을 평가·공개하는 세부지침 마련( ' 16.5)
  - 주요 건설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유형별 원인별 분석이 가능한 사고통계 DB 구축
  - 저가낙찰 등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불시 점검(현행 예고점검) 및 고용부와 합동점검 실시( ' 16.2~)

\* 저가낙찰공사, 위험공종을 포함한 공사, 사고이력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 등
- ② (취약분야 관리강화) 취약 부분인 가설구조물, 소규모 공사의 위험 공종(5m 이상 동바리, 2m이상 흙막이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16.3)
  - 타워크레인의 검사요건 추가\*, 검사주기 단축(2년 → 6개월) 등 건설 기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 16.9), 건설기계안전협의체 운영

\* 구조검토서 외에 기초부의 주요자재 제작증명서와 설치결과 증빙자료 등 추가

-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 인증을 강화하고, 건설자재 품질시험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확산

- ① (제도개선) 녹색건축 확산을 위해 인증제를 정비하고, 기부채납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16.12) 및 건축물 에너지성능의 시장가치화\* 추진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등에 건물에너지 소비정보·관리비정보 등 반영

-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산업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환경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빌딩의 시장기반 수익모델도 마련('16.12)

- 성능기반 에너지설계기준 강화('16.12), 면적별 에너지사용량 홈페이지(K-ap) 공개('16.10), 제로에너지주택 시공방법·표준설계안 마련('16.6)

- ② (시범사업) 제로에너지 빌딩 확산을 위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복주택·판교창조밸리 등에 패시브설계\* 적용

\* 고단열 고기밀로 에너지낭비 최소화('17년 패시브 → '25년 제로 목표)

-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로에너지 R&D 실증('13~'17.6, 노원구 국민임대 121세대)

## ○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③ (로드맵 마련) 도시별 교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자동차·물류 등 교통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16.12)

- '25년까지 항공기 연료효율 연평균 1.3%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항공사·공항공사별 온실가스감축 세부로드맵 본격 착수('16~'19)

\* 공항 주기기 지상의 보조장비를 사용한 전원공급, 고효율 신형 항공기 도입 등

- ② (인프라 구축)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및 주차구역 신설, 수소버스실증사업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확대 유도('16.12)

- 공항시설·주변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 시설 범위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 포함('16.6)

- ③ (캠페인) 직업군별 맞춤형 경제운전(Eco-Drive) 교육을 실시('16.3~)하고, 대국민 동참유도를 위한 경제운전 활성화 캠페인 확대('16.3~)

## □ 해양수산부

### ○ 양식면허 확대와 시설 확충으로 고급품목 대량생산 기반 구축

- 수요가 높은 전복 등 패류와 김 등 해조류의 양식면허를 확대

- \* 해조류 양식면적 : ( ' 14) 85,597ha → ( ' 17 전망) 89,827ha

- \* 패류 양식면적 : ( ' 14) 51,250ha → ( ' 17 전망) 53,813ha

- 참다랑어 종자와 육성기술을 민간에 보급하고 연어 양식에 적합한 지역을 조사하는 등 대량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

- \* 참다랑어 양식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어미사육 시스템 구축(30억원)

-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통해 매기 등 내수면 어종의 생산을 확대하고, 전문 유통·판매센터 설립을 추진

- \* 충북 괴산( ' 14~ ' 16), 전남 화순( ' 15~ ' 17) 추진 중

- \* (시설) 부지 3천평, 건축면적 2,750평, (예산) 200억원, (사업기간) ' 16~ ' 18

-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으로 부실어장을 정비하고, 어촌계 소유 양식면허에 어업회사법인 참여를 허용하여 외부자본 투자 유도

- \* 다만, 어업회사법인 참여는 40% 이내로 제한하여 영세 어업인 보호

### ○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재난예방과 사고대응 훈련 내실화

- 재난관리자·실무자 전문교육을 확대하고(1회 → 2회),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상·하반기)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

- 상황별(태풍·안개 등) 업무지침 수립, 상황전파훈련(월 1회), 중대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등을 통해 상황관리 역량을 제고

##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특수재난 협업체계 강화

- 8대 유형\*별 특수재난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대응역량을 진단·분석하여 평시 안전 관리와 매뉴얼 정비 등 부처의 역량 강화 지원

- \* 원자력(원안위), 감염병(복지부), 가축질병(농림부), 환경오염(환경부), 대형교통사고(국토부, 해수부), 정보통신(미래부), 에너지·산업단지(산업부, 고용부) 등



## □ 충청남도 현안에 대한 제언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업무보고 특성

- 기후변화 대응 중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하는 완화(mitigation)분야는 미래 창조과학부와 산업통산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진행
- 그 외 대부분의 부처들은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진행

### ○ 충청남도 정책방향에 고려되어야할 사항들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자체 역할 발굴·실행

- 1)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충청남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2) 인벤토리에 기인한 ‘충남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 3)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필수 항목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철저’
- 4) 효과적인 배출권거래제도 지원 ‘도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지원’
- 5) 다양한 상쇄사업 발굴 ‘산림탄소상쇄사업’, ‘농업탄소 상쇄사업’
- 6) 도민 인식전환을 통한 적극참여 유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강화’

→ 기후변화 완화 기여를 위한 에너지, 경제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목표 설정

- 1) 충청남도의 기후변화 정책통합 네이밍 제정 및 구체적 실현계획 수립

→ 태양광 등 온실가스 감축분야 중 충남 강점사업 유치노력

- 1) 국가 추진사업 분석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신사업 발굴연구
- 2) 혁신적 정책 아이디어를 통한 이중사업간 콜라보레이션 노력 경주

→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역맞춤형 적응정책 유지

- 1) 기후변화 적응의 ‘재해경감’에 더하여, ‘이익창출’ 분야 사업 발굴
- 2)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사업 분석 및 신산업 발굴 방안 모색